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 연구*

박준혜**

김정은 정권 시대의 북한 핵능력은 질적 양적으로 고도화되어 왔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들의 핵확산 동기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전통적인 분석방법인 세이건의 3가지 모델과 포터의 핵확산결정요소를 혼합하여 북한의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 역시 선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주요 핵개발의 명분으로 삼는다. 미중 갈등이라는 국제정치의 변화 속에서 중국 등 동맹국으로부터의 방위 위협을 경험하면서 독자적인 핵무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대 세습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 획득을 국가위신 증대로 선전한다. 다른 국가의 핵개발 제약 요인인 국내의 반발 여론과 국제사회의 규범이 적용되기도 한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수령과 당-정-군 엘리트 관계에서의 자율성 제약으로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목적대로 핵을 개발하는 요인이 크게 작용함이 발견된다. NPT 탈퇴로 국제규범 적용에도 한계를 지닌다.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정확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이 핵포기 유인을 압도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김정은, 핵보유 동인, 핵포기 유인, 세이건, 포터, 안보위협, 국가위신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북한대학원대학교, 2024) 중 제2장과 제4장의 핵심 논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1. 서론

인류가 핵무기를 개발한 이래로 핵확산의 동기를 밝히려는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핵개발의 동인을 규명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비확산의 방도를 찾는 길이기 때문이다. 냉전 시기 미소 간 공포의 핵균형을 이루면서 비확산 체제가 정립되어 온 결과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새로 핵개발을 시도하는 많은 국가들의 핵포기를 유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번째 핵보유국의 지위를 노리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비확산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국가의 핵주권을 내세워 핵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력화하고 핵 비확산 체제를 흔들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비핵화 정책을 근간으로 대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에 비핵화 정책은 의미가 없으며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전제로 핵군축 및 비확산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하고 있다. 과거 탈냉전 기간 중 핵을 보유했다가 포기한 핵포기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의 전망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당분간 핵개발을 지속하면서 핵무기의 질적, 양적 확대를 견지해 나갈 것으로 보아 김정은 정권의 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확실한 유인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현시점은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정책을 계속 견지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핵군축, 비확산 등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매우 중

대한 기로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동인에 대해 정치한 분석과 함께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비핵화 유인 수단들의 효과성을 대비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김정은 정권의 핵확산 동기보다 비핵화 유인이 더 크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고,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동인이 강력히 지속된다면 비핵화 정책을 수정하는 대안 마련의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북한의 핵확산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가장 큰 위협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찾아 비핵화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탐색하고 비핵화 정책을 지속 유지해야 하는지를 정책적으로 가늠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핵개발을 시도 혹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국가들 사이에 공통적이면서 개별적인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설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핵확산 동기모델의 대표이론인 세이건의 3가지 모델을 바탕으로 핵확산결정요소들을 망라한 포터의 모델을 보완한 혼합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 분석틀을 통해 3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을 찾고 4장에서는 핵포기 유인을 검증한다. 5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비교한 후 6장에서 비핵화 정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다.

2. 분석틀의 설정

1) 세이건의 3가지 모델과 포터의 핵확산결정요소 모델

세이건의 3가지 모델은 메이어(Stephen M. Meyer)의 동기이론을 확장해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원인을 안보모델(security model), 국내정치모델(domestic politics model), 규범모델(norms model)로 설명한다.¹⁾ 안보모델은 개별 국가들이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안보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핵을 개발하고 역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보모델에 따르면 핵포기 유인은 개별 국가들이 처한 근본적인 안보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²⁾ 국내정치모델은 특정한 국내정치적 이해, 관료적 이익·목적 등으로 인해 핵보유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개인, 부처, 군부, 정당, 이익단체 등의 정치적 관계에 주목한다.³⁾ 국내정치모델에 따른 비확산 정책의 함의는 이중적

1) Scott D. 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the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21, No.3(1996/97), pp.54-86.

2) 세이건은 안보모델의 대표적인 사례 국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예시했다. 공산주의 팽창에 안보적 위협을 느낀 남아공 정부는 핵무기 사용 위협을 억지하고 핵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려는 계획하에서 은밀하게 핵무기를 개발하였으나 1990년 소련의 붕괴로 안보위협이 사라지자 1991년 핵무기를 자진 포기하였다. 핵무기가 아닌 핵개발 계획을 포기한 경우로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핵을 가진 동맹국으로부터 핵우산을 보장받아 실질적으로 핵위협이 줄면서 핵개발을 포기한 사례다. 위의 글, pp.60-61.

3) Scott D. Sagan, "The Origins of Military Doctrine and Command and Control Systems," in Peter R. Lavory, Scott D. Sagan and James J. Wirtz(eds.), *Planning the Unthinkable: How New Powers Will Use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0), pp.16-46.

이다. 각 국가의 집권 세력, 관료집단 등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국내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핵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⁴⁾ 규범모델은 구성주의적 시각을 반영하여 국가의 위신,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특별한 규범적 상징이 그 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촉진한다고 본다.⁵⁾ 다만 핵무기는 국가위신과 정체성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비확산 측면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불법 행위에 대한 비난과 제재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이건의 모델은 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로 분화된 국제정치학 이론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반영함으로써 핵확산 동기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포터는 기존 핵확산 이론들을 종합하여 국가의 핵무장과 비확산에 미치는 요소들을 더욱 세분화했다.⁶⁾ 그는 핵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① 국가적 필수조건, ② 핵무장을 촉진하는 기초적인 압력, ③ 핵무장에 제약이 되는 기초적인 제약, ④ 상황적 요인 등으로 분류하여 총 27가지를 제시하였다.⁷⁾ 핵무장을 촉진하는 압력과 관련하여, 국제

4) 인도의 경우 영국에 대한 독립운동 당시부터 내려온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평화주의와 네루 수상의 비동맹운동,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운동 등의 윤리적 유산으로 인해 초기 자체 핵무기 개발이 자제되었다. Itty Abraham, "India's Strategic Enclave: Civilian Scientists and Military Technology," *Armed Forces & Society*, Vol. 18, No. 2(1992), pp. 231~252.

5) Scott D. 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the Bomb," *International Security*, p. 56.

6) 윌리엄 포터(William C. Potter), 『핵개발과 핵확산 금지정책』, 국방대학원 옮김 (서울: 국방대학원, 1983), 150~171쪽.

7) 포터가 제시한 핵개발의 필수조건과 관련한 기술적 논리는 현재 큰 의미가 없다. 1970년대에 이르러 핵기술의 진보와 타 국가로의 파급이 보편화되면서, 핵기술

적 측면에서는 ① 적대국의 위협에 대한 억지, ② 핵무기를 가짐으로서의 전쟁 수행에서의 이점, ③ 마지막 보루 및 최후 수단으로서의 핵무기의 유용성, ④ 군사·외교적 강제, ⑤ 핵무장으로 인한 국제적 지위의 증진, ⑥ 핵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증가한 자율성 등을 들었다. 국내적 측면으로서는 ① 핵을 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나 파급효과, ② 핵보유로 이익을 보는 관료나 군부,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압력, ③ 핵무장에 대한 국민적 여론의 지원, 정책 실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을 핵개발로 돌리고자 하는 유인 등을 제시하였다.

핵무장을 제약하는 요소와 관련해 ① 핵개발에 따른 적대국, 인접국 등의 반발, 동맹국에 의한 핵포기 압박, ② 제2격 능력이나 효과적인 지휘통제 체제의 부재, 신뢰성 있는 운반체 등의 획득 곤란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신뢰성 간의 차이, ③ 안보위협 감소, ④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국제비확산 규범체제의 존재, ⑤ 핵보유에 따른 타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제재 등을 국제적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국내정치적 제약요인으로는 ① 핵개발에 따른 비용, ② 핵개발을 반대하는 국내적 여론, ③ 새로운 관료나 경쟁자의 조성, 재정상의 자금배분의 변경 등에 반대하는 관료주의적 정책, ④ 지도자 개인의 철학이나 신념 등을 제시하였다.

2) 두 모델의 혼합과 분석틀의 구성

세이건 모델은 안보모델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점

을 가진 자만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전제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표 1〉 세이건과 포터 모델의 혼합 분석들

핵보유의 동인	핵포기의 유인
① 적대국의 안보위협 증대	① 적대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 감소
② 동맹국 안보공약의 약화	② 적대국 혹은 동맹국의 핵포기 압박
VS.	
③ 국가위신 및 국가 정체성 확립	③ 비확산 국제규범의 존재
④ 핵보유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④ 핵개발에 따른 경제제재의 부과
⑤ 핵보유의 국내정치적 활동	⑤ 핵포기 유인으로서 국내정치 양상

자료: 저자 작성.

은 인정되나 모델의 포괄성으로 인해 다양한 핵개발 동인들을 추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반면 포터(Potter)의 핵확산결정요소들은 모든 요소들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너무 분석의 수가 많고 세분화되어 있어 주요한 요인들을 추출해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이건의 모델과 포터의 분류를 조합하여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각각 5가지로 추출하여 대비한 혼합된 분석들을 〈표 1〉과 같이 도출하였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사례에 대입하면 북한의 핵보유 동인으로서 첫째, 김정은 정권이 느끼는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 인식 양상, 둘째, 동맹국의 안보공약의 약화로서 중국의 방기 위협에 직면한 압박과 핵개발과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셋째, 정통성이 취약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국가위신 및 국가정체성 확립 양상을 분석하고, 넷째, 실제 핵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효과성, 다섯째, 핵보유에 집착하는 국내 정치적 요소, 정권 안보적 양상을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유인으로서의 우선,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이어 협상이 아닌 군

사력을 이용한 김정은 정권의 핵포기 가능성, 현존하는 비확산 국제 규범의 유효성 및 한계, 북한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의 효과성, 북한 국내 정치적 요소들이 김정은 정권의 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비교해 볼 때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면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은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른 기존의 비핵화 정책의 유효성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3.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 분석

1) 대미 안보위협 증대

북한의 핵개발 역사를 보면 김일성 시기에는 기술적 한계와 국제사회의 통제로 핵개발의 모호성을 유지하려 하였고, 김정일 시기에는 실제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실존적 억지를 강화하고 억지의 신뢰성을 높이려 했다. 북한 핵개발의 분수령이 되는 것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출범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전에는 남북, 북미 관계 개선 움직임 속에서 협상에 방점을 두고 핵개발을 시도했다면,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의 위협에 본격 대응하려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정권이 승계하는 과정에서 핵무기 개발은 국가안보 및 체제 승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게 되었다.⁸⁾

실질적 핵능력 확보라는 김정일 시대의 안보적 유산을 물려받은 김

정은 정권은 대미 안보위협을 부각시키고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에 보다 주력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2.29 합의를 파기하며 대미 협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통해 핵개발 의사를 노골화하였다. 그해 3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였고 4월에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여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화하는 수순을 전개하였다. 집권 초기부터 병진노선을 유지하면서 핵무력 강화에 몰두한 김정은 정권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과 11월 29일 화성-15형을 발사를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2012년 집권 후 5년 만에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성공한 셈이다.

김정은 정권 시대 핵보유 담론은 ‘대북 적대 시 정책 철회’와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라는 두 축으로 이뤄져 왔다. ‘대북 적대 시 정책’의 구체적 의미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용례를 보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한미연합훈련, 미국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유엔 제재, 북한 인권 문제 제기 등 한미동맹과 관련된 이슈들을 망라한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과 10월 스톡홀름에서의 북미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 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⁸⁾고 주장했다. 대북 적대 시 정책이 미국의 안보위협, 체제 안전과

8) “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응당하며, 미국이 핵실험을 반대하는 것은 핵 확산 방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데 있다.” 『로동신문』, 2009년 5월 26일.

9) “북미 실무협상 결렬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9년 10월 6일.

주민 생존권 보장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임을 보여준다.

‘자위적 핵억제력’은 김정은 집권 시기에 새로 생긴 개념이 아니라 200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적대관계 청산에 실패한 이후 핵협상을 거부하며 미국의 안보위협을 확대 재생산하고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핵개발의 동인으로 삼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가 안보 차원의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핵개발이 주권과 자위권 차원의 조치임을 설파하면서 핵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북중관계와 핵개발

기존 동맹이론에서는 비대칭동맹의 경우 동맹 강대국은 연루의 위협을 느끼고 약소국은 방기 위협을 느낀다고 설명한다.¹⁰⁾ 중국의 경우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압박받는 등 ‘연루’를 경험해 왔으며, 북한의 경우 북중 동맹의 의지와 신뢰가 약화된 경우 ‘방기’를 경험하게 되어 결국 핵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과 결부될 경우, 강대국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대국은 연루와 방기 사이의 딜레마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¹¹⁾ 중국의 경우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를

10) Glenn H. Snyder, "Alliance Theory: A Neorealist First Cu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44, No.1(1990), pp.122~123.

11) Robert Koehane, "The Big Influence of Small Allies," *Foreign Policy*, Vol.2(1971), pp.162~172.

겪어 왔다.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면서 국력 상승을 이루고 있었던 제 2차 북핵 위기 당시에 중국은, 6자회담의 중재 역할을 통해 미국의 비핵화 정책에 협조하는 등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다극체제로 변모하고 미중 간 전략경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되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생존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김정은 정권 출범과 시진핑 집권 전후부터 중국은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동참해 왔지만, 북한 체제를 과도하게 위협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¹²⁾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위원회에 참여하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는 쌍궤병진을 주장하였다.¹³⁾ 2018년 북한의 대미 접근에 따른 영향력 감소를 우려한 중국은 7년간 중단했던 북중정상회담을 3차례 개최하기도 하였다.

북한 입장에서는 딜레마 속의 중국이 북한의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하겠지만 대북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속에서 방기

12) 박유진,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67쪽.

13)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이후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고 동시에 평화협정이나 북한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정당한 우려에 대한 논의 없이는 비핵화가 지속가능성 방법으로 이뤄질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평화회담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왕이 부장은 2024년 3월, 중국 양회 기자회견에서도 한반도 문제라는 병에는 중국의 처방전이 있는데 쌍궤병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이라고 주장하였다. “中왕이 “美, 잘못된 中 인식 계속… 北의 안보우려 해결해야”(종합),” 연합뉴스, 2024년 3월 7일.

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주요 동인이 되어왔다. 미중 갈등 관계가 지속되면서 중국은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지속할 여지를 주었고 김정은 정권은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의 대북 입장을 활용해 핵개발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3) 국가위신과 대외적 자율성의 증대

북한은 주권 및 자주권에 대해 “정치적 자주성의 구현이며 민족자결권의 완전한 실현 … 국내적으로는 최고 권력이며 대외적으로는 자주 독립”¹⁴⁾이라고 설명한다. 일반 국가들의 자주권 개념과 다르지 않다. 다만 김정은 시대에는 핵이 국가 존엄의 상징이 되고 핵자주권이 국가 자주권의 담보가 되는 변화를 겪는다.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에서 주권과 자주권을 견지하기 위한 밑천으로 ‘자위적 국방력’을 언급하며, 이는 ‘불패의 군사력’에 의해 보장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¹⁵⁾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 전후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속도와 위력, 핵보유국 지칭 용어 사용에 주력한다. 2018년 4월 이후에는 국가의 ‘지위’와 ‘국력’ 변화를 나타내는 포괄적 전략 용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된다.¹⁶⁾ 핵능력 과시에 집중하던 전략에서 핵무기로 높아진 국가 위상을 드러내는 쪽으로 변화한 것이 특징이다.¹⁷⁾

14) 사회과학출판사 엮음,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724쪽.

15)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로동신문』, 2019년 1월 8일.

16) “우리 당이 밝힌 강국의 지위를 평가하는 척도,” 『로동신문』, 2022년 8월 6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역사적지위,” 『로동신문』, 2019년 2월 22일.

국가위신의 증대는 대외관계에서 독자성과 자율성을 높이게 된다. 프랑스의 경우, 핵 개발로 하락한 국가 위상을 회복하고 대외관계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했다. 핵무력 완성으로 김정은 정권 시기 대미 역강압은 훨씬 대담해졌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6~2017년 당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정책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역강압이다.¹⁸⁾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라는 강압정책을 펼쳤고, 김정은 위원장은 ICBM 발사와 핵실험으로 맞대응했다. 이러한 대외관계에서의 자신감은 핵무기 완성이 뒷받침한다.

핵무기 완성에 따른 독자성·자율성의 확대는 강압뿐 아니라 협상 등 유화공세도 가능하게 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대남·대미 유화공세는 역설적으로 핵무기 체계가 완성됨으로써 가능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지만 국가위신 증대 측면에서 회담 결렬이 북한에 반드시 손해만은 아니었다.¹⁹⁾ 초강대국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직접 협상한

17) 홍민,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서울: 통일연구원, 2022), 57~58쪽.
 18) 국내 연구는 북한의 대외 협상행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강압외교에 대해 ‘역강압외교’를 펼쳐 협상을 전개해 왔다고 분석한다. 임수호,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정종관,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역강압전략에 관한 연구: 북핵문제를 중심으로”(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등 참조.
 19)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는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현재의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 돌파전을 벌여야한다”라고 하면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통해 경제제재와 외교 고립의 압박을 버터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것만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위상을 높였다. 향후 북미협상은 핵보유국 간 핵군축 협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김정은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는 측면도 엿보인다.

4) 핵보유에 따른 경제적 이점

핵보유로 인한 경제적 문제는 지출과 이익의 양면성을 가진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 등 핵 개발비로 약 11억에서 16억 달러(약 2조 원)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²⁰⁾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2021년 글로벌 핵무기 지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1년 기준, 2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 개발 비용으로 6억 4,200만 달러를 지출하였고 연간 국민총소득(GNI)의 3분의 1을 국방비로 지출하였으며 그중 6%를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였고 분석하였다.²¹⁾ 미국 국무부도 2021년 세계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WMEAT)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로 북한을 지목한다.²²⁾ 이들 보고서를 종합하면 북한은 매년 GDP의 25~30%를 군사비로 지출하는 것으

20) 북한의 경우 1984년 이후 2022년 말까지 대략 180여 회의 핵 및 미사일 시험이 진행되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추정치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상민 외, 『북한 핵·WMD 연례평가 보고서』(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2).

21) ICAN, *Squandered: 2021 Global Nuclear Weapons Spending*(Genève: ICAN, 2022).

22) 북한의 군사비 지출을 110억 달러로 추정했으며 GDP 대비 최대 26.4%로, 국내총생산의 1/4 이상을 지출했음을 밝히고 있다. US Department of State,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2019 참조).

로 판단된다. 핵무기 개발 비용은 광물 등 부존자원의 수출로 충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해킹과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돈으로 핵미사일 개발 비용을 조달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²³⁾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재래식 군비 지출을 줄여 전체 국방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⁴⁾ 북한도 2013년 병진노선 추진 당시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²⁵⁾고 강조한 바 있다. 핵무기 개발의 경제적 효과는 무기 수출로 인한 외화 획득 및 반대급부 등을 들 수도 있다. 1990년대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미사일 교환 커넥션의 사례처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의 대가로 북한이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로 현금이나 식량, 에너지뿐 아니라 핵, 미사일, 위성기술과 관련된 첨단 군사기술 등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²⁶⁾ 핵을 가짐으로써 부과된 제재로 인해 직접적인 외화 획득이 불가능하더라도 불법적인 거래, 군사기술 등과의 교환 형태 등으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보유 동인으로 작용하

2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는 2024년 3월 20일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7년에서 2023년 동안 해킹 등을 통해 30억 달러(약 4조 원)를 벌어들였으며 이 돈으로 핵무기 개발 비용의 40%를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내 사이버 범죄 급증 ... 주요기관 간부들도 해킹 피해,” 『데일리안』, 2024년 3월 21일.

24) 하경석·정성윤, “핵확산 논쟁과 북핵문제: 다차원적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 24권 1호(2015), 148쪽.

25) “당 중앙위 2013년 3월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26)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무기는?” BBC 코리아, 2023년 9월 12일.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국내정치와 정권안보

김정은 위원장은 내부 통치기반을 다지기 위해 핵개발의 진화는 필수적이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첫 핵실험인 3차 핵실험 성공 이후 국내적으로는 반미 대결을 강조하며 체제 결집을 노리는 한편, 핵실험 성공을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으로 선전하였다.²⁷⁾ 기존 연구는 민주주의 정권이 독재정권보다 핵무기 개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한과 같이 지도자 1인이 무제한 재량권을 가지는 사인(私人)정권은 국내 반발 없이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는데, 핵보유는 국제 위협을 막고 국내 비판을 잠재울 강압적 수단이기 때문이다.²⁸⁾ 따라서 젊은 나이에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 확보는 군부를 장악하는 유리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신흥 핵보유국들은 국내정치적 불안정을 방지하고 핵전력의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 핵 지휘체계를 정규군과 분리하여 지도자 개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킨 지위-명령계통을 유지한다.²⁹⁾ 핵무기 생산 결정과 군사 부문은 김정은이 위원장인 당중앙군사위가 관할하고, 핵무기

27) 핵실험 성공을 김정은의 업적이라 “인민을 위한 경제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담보.” 『로동신문』, 2013년 2월 16일.

28) 김보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의 원인과 한계: 북한의 수직적 핵확산과 정권안보,” 『국방정책연구』, 제33권 2호(2017), 40쪽.

29) 이근욱, “국제체제의 안정성과 새로운 핵보유 국가의 등장: 21세기의 핵확산 논쟁,” 『사회과학연구』, 제15권 2호(2007), 293쪽.

개발과 군수산업은 당 군수공업부가 책임지며, 핵능력 개발은 과학자 집단에게 맡기되 모든 결정은 김정은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핵무력을 정권 안보의 보루로 위치시켰다.

핵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학자 그룹의 관리도 핵무기 개발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이먼스(Jacques Hymans)는 이라크의 사례분석을 통해 과학자들의 연구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개입 등이 핵개발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한다.³⁰⁾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무기 연구소’ 등 핵무기 전담 연구조직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과학기술자의 역할과 공로를 치하했다.³¹⁾ 이처럼 김정은 정권은 국내정치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며 정권 공고화를 위해 핵개발을 매개로 삼았다.

4. 김정은 정권의 핵포기 유인 분석

1) 안보위험의 감소 가능성 검토

안보위험 감소에 따라 핵을 포기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지

30) Jacques Hymans, *Achieving Nuclear Ambitions: Scientists, Politicians, Prolifer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25~26.

31) 2017년 3월 22일 자 『로동신문』 정론에서는 국방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진정한 혁명가”, “숨은 애국자”, “시대의 힘있는 선구자”로 칭하며 김정은 원수님의 염원은 전체 인민을 과학기술 인재로 키우자는 것이라 전했다. 김보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의 원인과 한계,” 50쪽.

만 이를 북한에 적용하려면 여러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등과 같이 핵무기를 단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체제 생존을 위해 개발해 왔다.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려면 핵 개발에 쏟은 정치·경제적 기회비용을 상회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안전보장 확약과 같은 신뢰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핵폐기의 결단과 보상과 관련된 이행 시간도 짧게 해야 하는 데 북미 간에는 과거 핵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험이 있어 북핵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³²⁾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로 안보딜레마 문제를 들 수 있다. 안보딜레마는 한 국가의 군사력 증강이 상대국의 군사력 증강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말한다. 김정은 정권은 한미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 핵미사일 도발에 주력했는데, 이에 대해 한미는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한편, 확장억지력을 강화했다.³³⁾ 한미 안보동맹의 강화에 대해 북한은 “미국과 하수인들이 벌린 군사연습은 80여차례, 한국 괴뢰들이 단독으로 감행한 훈련이 60여차례나 되는데 과연 누가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진범들인가”라며

32) 우크라이나의 경우 1년 6개월이 소요되었고 리비아의 경우도 1년 10개월이 소요되었다. 대체로 합의에 도달한 후 늦어도 2년 내로 핵무기나 핵프로그램을 폐기했다. 박휘락, “핵폐기 사례의 분석과 북핵문제에 대한 함의,” 『한국군사학논집』, 제74권 3호(2018), 208쪽.

33)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 공동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을 위한 양국 간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구성하였고, 핵잠수함과 핵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 등 미국의 핵 전략자산들이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였다고 알렸다. “대통령실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 『조선일보』, 2023년 4월 29일.

“우리는 주권과 안전,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압도적인 최강의 군사력을 계속 비축해 나갈 것”³⁴⁾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극한에 이른 조선반도의 엄중한 정치군사 정세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에 기초해 안민군대와 군수공업부문, 핵무기 부문, 민방위 부문의 전쟁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³⁵⁾을 주문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출범 이후 핵무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은 감소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안보딜레마를 발생시켜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을 부추기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군사적 강압을 통한 핵포기 가능성

미국은 북핵 위기 때마다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도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핵위협을 멈추지 않으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고, B-1B 폭격기와 F-15 전투기로 NLL을 넘어 무력시위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에는 3개의 항모강습단이 한반도 근해에 집결해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B-2와 B-52 전략폭격기를 꺾에 배치해 훈련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강압에 대해 북한도 강하게 맞대응했다.

34) 김여정 담화, 『로동신문』, 2024년 4월 24일.

35) 조선중앙통신, 2023년 12월 28일.

2017년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 맨’이라 부르며 “완전 파괴할 수 있다”라고 비난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늑다리 미치광이”, “불망나니”, “겁먹은 개”라고 비난 하면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³⁶⁾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첨예 했던 북미 대결 구도는 북한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면서 대화로 전환되었고, 군사적으로 북한 핵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무산되었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현시점에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의 사용가능성은 매우 낮다. 핵무기를 완전히 갖추지 않았던 1, 2차 북핵 위기 때는 군사적 압박이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2017년 6차 핵실험으로 핵무력 개발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는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군사적 압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닐 수 있다. 미국이 선제공격 후 결과와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과거 클린턴 정부와 부시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군사작전의 성공보다는 군사작전 이후에 발생하는 후속적인 결과와 영향에 대한 확신과 대비가 없었기 때문이다.³⁷⁾

3) 비확산 국제규범의 제약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NPT 등 비확산 규범의 준수를 핵협

36) 『로동신문』, 2017년 9월 22일.

37) 박창권, “트럼프 정부의 2017 대북 선제공격 위협의 실효성 평가: 미국의 과거 선제공격 사례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2호(2019), 148~150쪽.

상 카드화하였다. 그러나 2003년 북한의 NPT 탈퇴 이후 비확산 레짐의 규범력은 북한의 핵포기에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다.³⁸⁾ 오히려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불법 행위로 규정한 유엔 안보리 제재 레짐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공개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휘둘리어 누가하는가가 문제라는 식의 강도적 논리와 이중기준이 공공연히 허용되는 불공정한 기구로 전락되었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몇몇 국가들이 안보리 회의를 강제로 소집한 것은 유엔 역사상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³⁹⁾이라며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들을 비난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이면서도 안보리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38) 규범모델로 비확산을 위한 처방을 내리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핵개발 동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의 안보공약이 신뢰성이 있어야 하나,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확장 억제뿐만 아니라 안보공약을 강화하게 될 경우 이는 역으로 비확산의 국제규범과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한국의 안보보장에 대한 미국의 조치들이 북한에 있어서는 또 다른 안보위협을 낳을 수 있고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거부할 명분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실의 안보 문제와 규범의 강화를 위한 조치들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정치에 있어 규범 모델이 갖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39) 2023년 12월 18일 북한이 고체연료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를 감행하자 그다음 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상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주장을 두둔하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책임론과 제재무용론의 입장을 펼치며 안보리 논의에 제동을 걸면서 반대하자 제재결의안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북한은 ICBM 발사가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컷뉴스』, 2023년 12월 20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연대해 유엔 안보리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사라지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함이다. 북한은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된 상황을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할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는 북한의 핵포기 유인으로 NPT 체제, 유엔 안보리 레짐이 제 역할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는 총 11차례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초기 결의안들은 전략 물자 조달을 막고 무기 금수와 금융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2016년 네 번째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 전반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게 되어 북한의 수출입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금융제재 등도 북한의 자금줄을 압박해 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각국은 양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2010년 이후 독자적인 제재 체계를 구축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불법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⁴⁰⁾

40) 어떤 나라가 미국 국무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그 나라는 수출관리법에 따른 수출 제한, 1968년의 무기수출통제법에 관련된 군수품목 거래 금지와 1961년의 대외원조법과 브레튼 우즈협정법, 1977년의 국제금융기구법 등에 따른 정상교역관계(NTR: Normal Trade Relations) 및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거부, 무역제재개혁과 수출진흥법(TradeSanctions Reform and Export Enhancement Act of 2000)에 따른 상업

〈표 2〉 제재부과를 전후한 북한의 경제 지표

연도	실질경제성장률(%)	실질 GDP(1989=100)	북중 무역 규모(억 불)
2012	1.2	83.4	59.3
2013	1.1	54.3	65.5
2014	1.0	85.1	63.6
2015	-1.1	84.2	54.3
2016	3.9	87.5	58.3
2017	-3.5	84.4	49.8
2018	-4.1	80.9	24.1
2019	0.4	81.2	28.0

자료: 정방호, “북한 지도자의 대미인식이 핵외교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제77권 1호(2021), 134쪽 재구성.

군사적 옵션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핵개발 비용과 제재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다면 북한의 핵확산을 저지할 유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제재에도 경제적 압박을 견딜 것이라는 견해와 제재의 장기화로 북한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견해가 학계에서 대립한다. 대북제재의 한계론의 입장은 북한이 자립자급형 경제구조를 유지해 왔고,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논거를 든다.⁴¹⁾ 그러나 〈표 2〉에서 보듯이 김정은 집권기 전반부는 중국과의 무역확대, 시장화 경향, 국영부문의 확대 등으로 경제지표가 양호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대북제재

수출지원 금지, 대외활동수권법 등에 관한 원조, 차관, 신용, 보험, 보증금지 등 혹독한 제재를 받는다. 임수호, “미국의 대북제재와 경제적 관계정상화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1호(2019), 127~156쪽.

41) 양운철·하상섭, “UN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한계: 강제성의 제한과 전략적 선택의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2012), 143~150쪽.

영향으로 경제지표가 악화됨을 보여준다.⁴²⁾

2019년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한 협상 조건 중 하나가 2016년 3월 이후 부과된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해제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자력갱생이나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의 도움으로 제재를 회피할 가능성은 있지만,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한 북한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⁴³⁾

5) 핵포기 유인과 국내정치적 양상

독재정권에서는 당·정·군 엘리트들이 정권을 지탱하는 운명공동체이다. 설령 권력이 분산되더라도 북한과 같이 수령이나 국가주권처럼 신성시되는 핵무기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최고 통치자가 행사하면 군부와 과학자, 관료 엘리트에게 부여된 핵개발의 수혜를 오로지 통치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⁴⁴⁾

국내정치적 핵개발 제약요소로 반핵 여론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언

42) KOTRA, 『2018 북한 대외무역 동향』(서울: KOTRA, 2019), 1쪽.

43) 하노이 회담 시 대북제재 해제 요구에 대해 북한 내부의 경제정책에 주목하여 분석한 연구도 흥미롭다. 2016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개발5개년 전략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야심차게 준비된 계획이었으나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탄력을 받지 못하자 하노이 회담에서 경제제재의 완화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 남한과의 경제협력 등이 타개된다면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민경,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전후한 북한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 경제제재의 영향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 32권 1호(2020), 132~134쪽.

44) 김보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의 원인과 한계,” 41~42쪽.

론과 집회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국민의 반핵 여론 조성은 불가능하다. 특히 북한은 핵 고도화로 인한 경제 제재가 부과되면서 핵개발의 대중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여론 통제를 위해 민족주의적 규범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⁴⁵⁾ 최고지도자가 핵보유 결단으로 인민의 안전과 번영을 담보한다는 ‘핵민족주의’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김정은 정권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⁴⁶⁾ 김정은 정권 출범과 3차 핵실험 이후 ‘인민’, ‘번영’, ‘경제강국’, ‘민족만대의 유산’ 등의 구호를 쏟아냈고 수소탄 시험을 성공한 4차 핵실험부터는 민족주의적 담론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2017년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 북한은 국가 핵무력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5년 이내에 완수했다고 주장한다.

종합해 보면 북한의 핵보유 동인은 수령, 즉 최고지도자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군부와 관료, 과학자 그룹은 핵보유로 인한 지도자와 국가적 위상 증대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향유하며 최고지도자의 결정을 착실히 이행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체제의 특성상 반핵 여론이 생성될 여지가 없어 김정은 위원장이 핵포기를 결단하지 않는 이상 북한의 비핵화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45) 부승찬·박경진,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동기와 지속 요인: Scott D. Sagan의 핵개발 동기 모델의 확장,” 『국가안보와 전략』, 제18권 1호(2018), 97쪽.

46) 핵담론의 대표적인 것으로 민족주의를 들 수 있는데 인도, 이란 등과 같이 국가 민족주의가 핵을 매개로 작동하는 사례를 개념화한 것으로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엘리트와 인민들을 통합시키는 동시에 정권이 처한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핵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조영임·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핵개발의 국내정치동학,” 149~182쪽.

5.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가능성과 대안의 탐색

1)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동인과 비핵화 유인 비교

대미 안보위협이 북한 핵개발의 근간임은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인식은 김일성 시절부터 내려오는 공포와 피포위 의식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체제위기가 극대화된 탈냉전 시기에 외부로 표출되었고 1차, 2차 북핵위기를 거치면서 김정은 정권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확고한 핵보유 동인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관여와 강압을 통해 저지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북한의 대미 위협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핵에 더욱 집착하게 만드는 딜레마를 낳았다.

북한의 핵개발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 동맹국의 안보공약이 약화되는 가운데 독자적 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에서 나온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 냉전 시기 소련은 북한에 핵무기 기술을 전수하지 않았고, 탈냉전 이후 중국은 이중적 대북 태도를 취했다. 대미 안보위협 해소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안보적 요소이기는 하나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미중 패권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진영 간 갈등, 동북아 신냉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김정은 정권이 느끼는 안보적 불안감은 핵능력 확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⁴⁷⁾

47) 하노이 회담 이후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로써 북한의 핵포기는 더욱더 불투명해졌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결코 협상용이나 그 무엇을 얻기위한 흥정물이 아니며 ...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의 가중되는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

인도, 파키스탄 등 핵보유국이 된 나라들은 대체로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 직면했다. 이 나라들은 비난과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국가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동기가 더 컸다고 봐야 한다. 북한 역시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통해 국제 위신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이 제재와 봉쇄, 국제적인 고립을 예상했음에도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았던 동인은 핵무력에 기반을 둔 ‘자주성’ 확보를 생존전략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후손 세대 안전의 담보’라는 정당성의 명분으로 확대 선전하고 있는데, 국가위신의 증대라는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⁴⁸⁾ 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비확산 규범은 NPT 체제에서 벗어나 있는 북한의 핵개발을 통제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비확산 조치로 ‘경제제재’만이 남은 상황이다. 비핵화 유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대북제재 해제를 꾀했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자력갱생을 내세워 대북제재를 정면 돌파하고자 하고 있으며, 중·러와의 사회주의 연대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를 무실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국제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동인 분석에 있어 정권안보를 빼놓고는 설명

가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노선.” 『로동신문』, 2013년 5월 25일.

48) 2023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10년 업적 중 하나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서 기적적인 성과들을 연속 다발적으로 이룩했다”라고 하고 “대세를 주도하는 공화국의 영향력을 비상히 제고하고 후손 만대의 안전 담보를 마련했다”라고 주장했다. 『로동신문』, 2023년 1월 30일.

이 불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은 세습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핵무기를 체제결속의 중심에 배치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전략국가론, 우리 국가제일주의 등 국가담론을 재생산하면서 핵개발의 정당성을 핵민족주의와 연결시켜 왔으며 핵무기를 국가 주권과 자주권의 원천으로 신물화(神物化)해 왔다. 김정은 집권시대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달성하지 못했던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한다면 선대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⁴⁹⁾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은 이를 매개로 담론을 재생산해 세습정권의 안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권 안보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⁵⁰⁾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핵보유 동인으로 설정한 5가지 요소, 핵포기 유인으로 설정한 5가지 요소를 대비·분석하고 북한에 적용하였을 때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이 비핵화를 유인할 요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 주목할 것이 정권안보적 요인이다. 김일성 시대의 경우 주한미군, 한미동맹에 따른 대미 안보위협이 주가 되었으나, 탈냉전 이후 체제붕괴의 위기를 맞은 김정일 시대와 세습체제의 안착을 위한 상징이 필요했던 김정은 시대에서는 정권안보의 보루로서의 핵보유가 핵개발의 주된 동인으로 확장되

49)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은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성 조치로서의 목적도 있었지만, 외부 위협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확대시켜 후계구도상에 있는 김정은이 이러한 위협에 정면 대응함으로써 지도자로서의 위기관리 능력을 인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성격도 있었다는 분석은 적절해 보인다. 김상범, 『북한의 핵과 정치권력의 변화』(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24), 19쪽.

50) 조영임·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핵개발의 국내정치동학: 정당성의 정치와 핵 민족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2호(2019), 156쪽.

〈표 3〉 북한의 핵개발 동인의 시대별 비교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핵개발	초기 단계	개발 시동 단계	본격 개발 단계
핵개발 동인	대미 안보위협	대미 안보위협 정권 안보	대미 안보위협 정권 안보 핵보유국으로서의 국제 위상 정립

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보유국으로서의 국가위신의 증대는 핵개발의 동인이기도 하지만, 핵개발의 결과로서 정권안보적 동인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비핵화 정책의 유지 및 대안의 탐색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핵포기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정은 정권이 정권 안보 보장장치로서 핵개발의 동인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안보적 보장장치도 체제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의 근본적 동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회의론은 부상하고 있는 형편이다.⁵¹⁾ 현재 한미는 비핵화 정책을 견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실제로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제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의 완성, 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 등이 그것이다.⁵²⁾ 미국 내에서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51) 최우선, “북한 비핵화 전망과 한국의 정책,” 『KDI 북한 경제리뷰』, 12월호(2019), 3~6쪽.

비핵화 정책의 유지는 비현실적이며, 북한 핵문제를 위기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⁵³⁾ 학계에서는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핵능력 감축이나 점진적 관계 개선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들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⁵⁴⁾

북한의 핵위협에서 벗어나 비핵화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군비통제적 접근을 제시하는 국내 연구가 주목되는데, 김동엽(2022)의 경우, 평화충분성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포괄적·협력적 군비통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통적 군비통제에서 접근하는 강압이나 협력적 접근법을 넘어 국제규범적 측면과 인간안보적 차원으로 확대된 군비통제를 통해 군사적 영역과 비군사적 영역 간에 연계성을 도모하자고 주장한다.⁵⁵⁾ 김영준(2023)의 경우, 과거의 일괄 타결이나 단계적 이행 방식이 아닌, 단계별 협상을 통해 이행 후 보상을 제공하고 다음 단계를 추진하는 접근으로, 남·북·미 간 상호 위협을 줄이기 위

52)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통해 핵위협을 억제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며, 외교적 접근과 대화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담대한 구상’ 해설 자료(2022).

53) 미국 외교협회(CFR) 하스 회장은 “제제완화를 대가로 북한에 군축 협상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동아일보》, 2022년 10월 20일자)한 바 있다. 미국 미라 랩-후퍼 NSC 선임보좌관은 “비핵화를 향한 중간단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라고 언급(24.3.)하였고, 미 대선 기간 중 공개된 민주당과 공화당 정강정책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비핵화’ 단어가 빠진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핵위협 억제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였다. 《서울신문》, 2024년 11월 1일.

54) Andrei Lankov, “The Perspective from Pyoungyang: Limits of Compromise,” *Survival*, Vol.63, No.6(2021), pp.107~118

55) 김동엽,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군비통제의 이론적 고찰과 접근,” 『인문사회 21』, 제13권 5호(2022), 3657쪽.

한 군비 통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핵전쟁 방지, 핵 및 재래식 전력 안정성 증대, 군비 통제 조약 확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제거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⁵⁶⁾ 결국 북한 스스로 핵보유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제재 해제,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라는 세 가지 트랙을 정교하게 배열하면서 핵위협이 안보적 위협임을 감안, 군비통제적 접근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비핵화 정책은 포기되어야 하는가? 비핵화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 기초하여 북한의 핵능력 감축에만 초점을 두는 것도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다. 현실론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전제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으며 협상의 동력도 약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핵화 정책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⁵⁷⁾

6. 결론

북한 핵문제 발발이 1980년대 중반으로 본다면 어느덧 북한 핵문제는 40여 년이 흐르고 있다.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 속에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이 여러 차례 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포기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

56) 김영준, “북핵 접근의 현실론과 한반도형 핵 군비통제 방안,”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2023), 90~95쪽.

57) 이남주, “한반도 비핵화는 가능한가?: 비핵화 협상의 쟁점과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PEACES』, 창간호(2022), 125쪽.

한의 핵포기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강압과 외교적 강제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유도하는 비핵화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북한이 자력갱생을 통해 버티기로 일관하거나 동맹국의 원조 등 제재를 회피할 수단을 찾는다면 경제제재 역시 핵보유 동인을 상쇄할 만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와 같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사례는 탈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비확산 정책에 편승한 결과였다. 북한은 탈냉전으로 안보위협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기존 핵포기 국가 사례들을 적용하는 연구는 이제 한계가 있다.

북한 핵개발은 김정은으로서의 정권 세습, 미중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동북아를 둘러싼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신냉전 도래 시기의 한 복판에 있다.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속에서金正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은 정권을 유지하고 억지와 협상에 대비한 최대한의 핵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보다 북한의 핵보유를 추동하는 동인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북한 정권의 의도에 비추어 그 동기를 억제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본 연구는 비핵화 정책은 유지하되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과거 핵군축 협상 사례와 군비통제 방안, 비확산 조치들의 유효성을 지속 검증해 나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투고: 2024.09.27. / 수정: 2024.11.12. / 채택: 2024.12.02.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사회과학출판사 엮음,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2) 신문

“김여정 담화,” 『로동신문』, 2024년 4월 24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역사적지위,” 『로동신문』, 2019년 2월 22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로동신문』, 2019년 1월 8일.

“우리 당이 밝힌 강국의 지위를 평가하는 척도,” 『로동신문』, 2022년 8월 6일.

“우리의 핵억제력은 결코 협상용이나 그 무엇을 얻기위한 흥정물이 아니며…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의 가중되는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노선,” 『로동신문』, 2013년 5월 25일.

“인민을 위한 경제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담보,” 『로동신문』, 2009년 5월 26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응당하며, 미국이 핵실험을 반대하는 것은 핵확산 방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데 있다,” 『로동신문』, 2009년 5월 26일.

3) 기타 자료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시 ‘2024년 투쟁방향에 대한 강령적 결론,’” 조선중앙통신, 2023년 12월 28일.

“당 중앙위 2013년 3월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북미 실무협상 결렬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9년 10월 6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 김상범, 『북한의 핵과 정치권력의 변화』(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24).
- 이상민 외, 『북한 핵·WMD 연례평가보고서』(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2).
- 포터, 윌리엄(William C. Potter), 『핵개발과 핵확산 금지정책』, 국방대학원 옮김(서울: 국방대학원, 1983).
- 홍민,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서울: 통일연구원, 2022).
- KOTRA, 『2018 북한 대외무역 동향』(서울: KOTRA, 2019).
- _____, 『2019 북한 대외무역 동향』(서울: KOTRA, 2020).

2) 논문

- 김동엽,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군비통제의 이론적 고찰과 접근,” 『인문사회21』, 제13권 5호(2022), 3649~3662쪽.
- 김보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의 원인과 한계: 북한의 수직적 핵확산과 정권 안보,” 『국방정책연구』, 제33권 2호(2017), 35~64쪽.
- 박유진,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박창권, “트럼프 정부의 2017 대북 선제공격 위협의 실효성 평가 : 미국의 과거 선제공격 사례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2호(2019), 115~160쪽.
- 박휘락, “핵폐기 사례의 분석과 북핵문제에 대한 함의,” 『한국군사학논집』, 제74권 3호(2018), 189~214쪽.
- 양운철·하상섭, “UN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한계: 강제성의 제한과 전략적 선택의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2012), 143~175쪽.
- 이근욱, “국제체제의 안정성과 새로운 핵보유 국가의 등장: 21세기의 핵확산 논쟁,” 『사회과학연구』, 제15권 2호(2007), 280~310쪽.
- 이남주, “한반도 비핵화는 가능한가?: 비핵화 협상의 쟁점과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 접근,” 『평화들PEACES』, 제1권 1호(2022), 103~132쪽.
- 임수호,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_____, “미국의 대북제재와 경제적 관계정상화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1호(2019), 127~156쪽.
- 정종관,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역강압전략에 관한 연구: 북핵문제를 중심으로”(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조영임·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핵개발의 국내정치동학: 정당성의 정치와 핵 민족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2호(2019), 149~182쪽.
- 하경석·정성운, “핵확산 논쟁과 북핵문제: 다차원적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4권 1호(2015), 141~167쪽.

3) 신문

- “대통령실 ‘위성탄 선언’은 제2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 『조선일보』, 2023년 4월 29일.
- “북한 내 사이버 범죄 급증… 주요기관 간부들도 해킹 피해,” 『데일리안』, 2024년 3월 21일.

4) 기타 자료

-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무기는?” BBC 코리아, 2023년 9월 12일.
- “中왕이 ‘美, 잘못된 中 인식 계속 … 北의 안보우려 해결해야’(종합),” 연합뉴스, 2024년 3월 7일.

3. 국외 자료

1) 단행본

- ICAN, *Squandered: 2021 Global Nuclear Weapons Spending*(Genève: ICAN, 2022).
- US Department of State,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2019).

Hymans, Jacques, *Achieving Nuclear Ambitions: Scientists, Politicians, Prolifer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2) 논문

Snyder, Glenn H., "Alliance Theory: A Neorealist First Cu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44, No.1(1990), pp.103~123.

Abraham, Itty, "India's Strategic Enclave: Civilian Scientists and Military Technology," *Armed Forces & Society*, Vol.18, No.2(1992), pp.231~252.

Koehane, Robert, "The Big Influence of Small Allies," *Foreign Policy*, Vol.2(1971), pp.161~182.

Sagan, Scott D.,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the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21, No.3(1996/97), pp.54~86.

_____, "The Origins of Military Doctrine and Command and Control Systems," in Peter R. Lavory, Scott D. Sagan and James J. Wirtz(eds.), *Planning the Unthinkable: How New Powers Will Use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0), pp.16~46.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 Kim Jong-un Regime'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Incentives for Nuclear Abandonment in North Korea

Park, Joon Hye(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Under the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have advanced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and this progression continues today. Through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incorporates Scott Sagan's three models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William Potter's determinants of nuclear decision-making, in this study I analyze North Korea's motivations for maintaining its nuclear arsenal and potential incentives for denuclearization. Like previous regimes, Kim Jong-un's regime cites security threats from the United States as the primary justification for nuclear development. Amid shifting international dynamics, particularly the US-China rivalry, North Korea has faced the risk of abandonment by allies such as China, prompting the regime to build an independent nuclear force. Additionally, the regime promotes its nuclear status as a means to enhance national prestige, viewing it as a

way to secure legitimacy and overcome the vulnerabilities of its third-generation hereditary leadership. While domestic opposition and international norms have served as constraints on nuclear development in other countries, these factors are less significant in North Korea. Due to the unique structure of the regime—where the autonomy of elite relations between the leader, the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is limited—Kim Jong-un’s personal will and objectiv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driving nuclear development. Furthermore,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limits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norms. Considering the challenges of accurately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motivations for retaining nuclear weapons under the Kim Jong-un regime outweigh the incentives for denuclearization.

Keywords: Kim Jong-un, nuclear retention motivations, denuclearization incentives, Scott Sagan, William Potter, security threats, national prestige